

쿠팡, 개인정보 3300만건 유출… 공동현관 비번도 털렸다

과기정통부, 쿠팡 침해사고 민관 합동조사

웹 접속기록 분석 3367만건 유출… 제3자 정보 포함
24시간 신고 규정 위반 과태료… 재발 방지책 요구도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3300만건을 넘어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범인이 열람한 배송지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조회 횟수는 1억 5000만건에 유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에 관한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TB 분량(데이터 6642억 건)을 분석,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사건 초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370만건으로 추정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와 3367만여건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

5000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가 포함됐

고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 노트북도

포렌식 조사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

에서는 이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 4800만여 차례 조회해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2차 범죄에 약용될 우려가 커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

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5만여건 조회됐다.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졌는지 확 인된 바는 없다.

조사단이 파악한 정보 유출 규모는 중국

인 전 직원이 지난해 11월 25일 쿠팡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장한 유출 규모보다는 작다.

범인은 지난해 11월 8일까지 자동화된 웹 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정보 유출에 다수의 IP가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 유출한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은 범인을 종국이라고 특정해 표명하지는 않았다.

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속, 대규모 정보 유출을 했는데도 쿠팡 측

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이 사전에 실시한 모의 해킹에서 드러난 바 있지만 쿠팡이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단은 쿠팡에 인증기 발급·사용 이력 관리와 비정상 접속행위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자체 보안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쿠팡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 보고한 시점인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보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에 당국에 신고하며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한 대 대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정보

유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쿠팡에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2024년 7

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기록이 사

제되고 지난해 5월 23일~6월 2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사라진 데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단은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취득하

고도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정책

수립을 미흡하게 한 점을 확인하고 보완

을 요청했다. 쿠팡이 보완 미비에 다른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

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

달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올해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 기업 대응 전략 짚는다

광주경총-조선대 글로컬추진단, 광남일보서 특강
양주얼 변호사 초청… 주요 쟁점·실제 사례 등 전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1일 오후 2시 광남일보 1층 연회장에서 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과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관계법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특히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에 따라 원청의 중층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문제와 단체협약 위반 등 권리 분쟁까지 쟁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사례에 중심으로 한 설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강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 신청은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 (062-608-993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

신차 구매 예정자 75%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안전성·브랜드 신뢰도 구매 결정 요인 작용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 구매 예정자 10명 중 7명은 전기차 구매를 긍정적

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구매 판단에 여전히 안전성과 브랜드 신뢰도가 한정적이다. 전기차 구매 의향은 75.1%

로, 전기차 적극 고려는 18.4%로, 전기차 고려 안함은 30.3%로 나타났다.

10일 모바일 커뮤니티 플랫폼 카봇모빌리티는 올해 신차 구매 예정자 45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도 검토 대상이다'가 4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전기차를 적극 고려 중' (32.8%), '배터리 수명 및 교체 비용 (32.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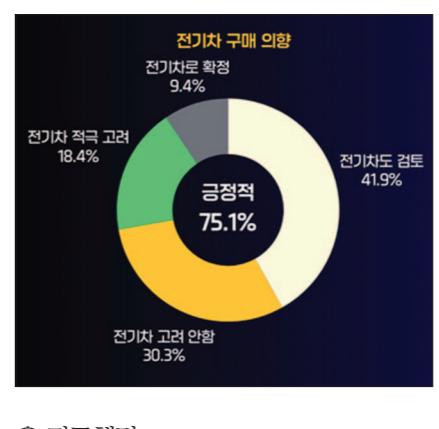
중국 전기차 브랜드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으나 신뢰도가 아직 낮다(38.6%)'가 가장 많았다.

매력 요인으로는 '가격 경쟁력 (64.3%)'이 압도적이었지만, 우려 요인은

'품질 및 내구성(63.2%)', 'AS 및 서비스 네트워크 부족(60.6%)', '안전성과 배터리 회사 위험 우려(54.2%)' 등 기본 신뢰 영역에 집중됐다.

전기차를 고려하는 이유로는 '유류비 대비 충전비 절감(62.5%)'이 1위였고,

'정부 보조금 지원(41.3%)', '세제 혜택



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차량 선택 기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2%에 그쳐,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구매 판단 요소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FSD 등 고도화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이 76.5%로 집계됐으며, 선호 구간은 300만~500만 원 미만이 40.5%로 가장 높았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힘차게 달린다!

소외지역 원스톱 금융지원

격오지, 전통시장 등
금융 소외지역 사업장 방문(연 70회)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
재무상담까지 현장에서 즉시 지원

이자 부담 낮은 저금리 대출

'가드림' 전용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

이자지원(3.0~3.5%)을 통해
실질 부담 금리 1% 대

현장 목소리를 담는 소통

현장 간담회를 통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전남도 정책홍보 및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 발굴

전남신용보증재단 가드림금융센터 ☎ 061-729-0662